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에 관한 연구

안 해 영(국립보건원)

◁ 목 차 ▷

- I. 서 론
- II.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과 특징의 변화
- III. 199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욕구(need)와 지원
- IV.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 V.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의 방향과 역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분단을 규정하여온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분단극복을 위한 민족적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발생과 대응방안은 통일을 지향하는 올바른 방향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은 남북분단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그 성격은 달라졌으며 특히 1994년 이후 이탈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향이 시기에 따라 달라져 온 것은 남북과 관련된 주변정세 및 국내의 경제·정치적 상황에 기인하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의 변화를 야기하고, 변화된 욕구에 대응하여 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진입 순간부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심

리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영역들은 상호 독립적이라기 보다는 서로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남한사회의 적응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의 지원정책은 남북분단 초기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욕구에 눈높이를 맞추었다기 보다 남북대결에 보다 의미가 실려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들이 남북 양체제의 선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체제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들의 새로운 환경인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정은 이들의 후세대, 그들이 통일 후 주민이든 혹은 그 이전 대량 탈북 사태의 주민이든 간에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자체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본래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성원의 사회적 기능회복을 통한 사회적응의 상태를 유지 시켜 나가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빈곤, 실업, 부적응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인간을 중심으로 완충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적 기능회복을 통한 적응의 상태가 가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생활의 충족, 사회체계의 적응,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사회복지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궁극적인 적응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연금, 의료보장, 생활보호 등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은 초기의 일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과 더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도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여 적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돈의 시간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고도의 개별화된 욕구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해 나가는 서비스로서 정책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상자 욕구에 맞게 무제한적이고 풍부한 서비스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기능은 특히 사회적 변동의 시기에 개인적 삶이나 개인적 위급 상황에 밀착되어 다양한 욕구 충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판이한 정치적 이념과 생활가치를 갖고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혁명적인 흔들림이 있는 시기이다. 사회복지의 기능은 특히 이러한 시작의 시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립 필요성의 당위가 있게 된다. 특히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의 방향 설정은 한국통일에 있어서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개별적 욕구에 대응한 준비 작업이며, 통일의 후유증을 줄여 나가는 방안개발에 기준점이 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적응과 통일후의 북한주민의 남한생활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즉 자발적으로 남하한 북한이탈주민과 환경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남하한 경우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자발적이긴 했지만 단독이나 일부가족만 남하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이탈주민과 자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남하할 수 있는 통일이후의 상황과는 사회적응에 매우 차이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불리 통일이후의 상황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북한에서의 생활에서 남한생활로의 전환과정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분석하여 사회복지 영역이 담당해야 할 몫을 정립해 나감으로서 이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또한 이를 응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욕구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적절한 사회복지 지원책을 고찰하여 바람직한 적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1990년 이후 탈북의 증가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욕구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를 파악하고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욕구가 남한사회

에서 잘 수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며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적절한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원은 어떤 형태이어야 하는가 등에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북한이탈주민의 욕구를 인식하고 적절한 남한사회의 사회복지적 대응책을 고찰하여 바람직한 적응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째, 이와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해 나가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무작위로 7명을 심층 면접하였고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과의 집단대화모임에 참여하였다. 이 집단대화모임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대표:이우정)에서 주관하였고 1997년 11월부터 1999년 2월까지 기획되었다. 1998년 3월부터 1998년 7월까지의 주제는 「북한이탈여성의 북한생활」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1998년 9월부터는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적응」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및 욕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8년 통일부 주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수한 성격으로 연구자 개인의 전수조사는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자료의 사용은 불가피 했으나 통일부 자료 보고서의 경우 본 논문의 방향과는 다소 달랐다. 따라서 원자료를 다시 CODING작업을 한후 SPSS(7.5 for windows)를 활용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을 하였다. 원 자료¹⁾의 대상자는 1949년부터 1998년까지의 입국자였다. 그러나 1969년까지의 18명이 포함되어 있을 뿐 1970, 1980년대의 입국자는 1명도 없었으며, 1990년대 입국자의 전부, 즉 1990년 이후부터 1998년까지의 입국자 328명 중 유아·사망·미배출자 등의 42명을 제외한 국내 거주자 286명이 대상이 되었

1) 통일부의 자료 보고서의 조사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대상 - 1990년 이후 입국자 329명 중 국내 거주자 286명(유아·사망·미배출자 제외)대상으로 다시 총 214명(75%)의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함.
- ② 조사분석방법 - 설문지를 통한 우편 조사 (경찰청 협조)
- ③ 조사기간 - 1998.10.19 ~ 1998.11.14 (27일)

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입국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1990년대 이후 입국한 국내거주자 286명 중 응답해온 응답자 221명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이 중에서 응답의 내용파악이 거의 불확실한 2명을 제외시켜 총 219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II.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과 특징의 변화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주변상황과 남북의 정치·경제적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향을 결정하여 왔다. 북한이탈주민의 상황 변화에 따른 욕구를 인식하고 이에 적절한 남한사회의 사회복지적 대응책을 고찰해 나가는 과정을 본 장에서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특징 변화와 욕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의 변화

1) 발생환경의 변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은 주변적 상황과 시대적 변수에 따라 그 성격과 형태가 달라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발생과 관련된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남북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1990년을 전후하여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면서 특징적 구분²⁾을 할 수 있다. 1990년 이전

2) 시기적 구분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1) 동구권의 변화로는 1990년 10월 독일통일, 1991년 12월 소연방해체 등의 요인들과 동구권과 남한 정부와의 관계 개선, 즉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정식 수교, 1990년 9월 소련과의 수교, 1992년 8월 중국과의 수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개선시기 등도 고려하였다.
- (2) 북한의 1994년 김일성 사망 등의 정치적 사건들과 남한 정권교체시점 등을 고려하였다.
- (3)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1993. pp. 6~20에서 보면 통일논의의 특징적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제1기 1945년~1953년 - 통일논의의 생성기(분단확정기)

의 분단체제고착화 상황은 1948년 이후 미국과 소련의 한국문제 처리과정에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여 자국의 이데올로기 실현을 위한 정치 형태를 형성하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강대국의 영향권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분단 이후 김일성 중심의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자주·자유·평등의 보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전후 경제 재건의 당면성과 무력 통일의 불가능성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세계적 냉전구조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상태의 고조는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추구하게 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북한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1980년 후반에 현저하게 돌출되어 북한사회 전반의 균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1994년 김일성 사후 경제난 지속 및 설상가상의 자연재해 등에 연유한 식량배급제의 위기는 가부장제적 국가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남한에서도 반공을 기본 이념으로 군부를 성장시키고 정치권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 건설로 1960년대를 보내며 절대적 빈곤의 감소 및 경제성장의 목표는 군사정부체제하에서 달성되어왔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선성장·후분배의 경제구조에서 구조적 취약점들이 표출되면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나 정치적으로 '유신'체제로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표면적 안정을 찾게 된다. 그러나 재분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민주주의 실현의 욕망이 커져가는 1980년대에 와서는 위로부터의 제한적이기는 하나 민주주의 제도화의 노력이 일반시민의 수준에서의 자유화 운동과 함께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반공 및 군사정부체제하의 정치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입국한 탈북자들은 정치적 정당성의 배경이라는 국가안보체제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나가는 수단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1993년 문민정부 이후 북한의 체제 약화에 따른 상대적인 정치·경제적 우위의 상황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와같은 남북의 상황과 주변정세가

제2기 1954년~1970년 - 통일논의의 공백기

제3기 1971년~1987년 - 통일논의의 해방기

제4기 1988년~1993년 - 통일논의의 개화기

변화하는 상황에서 탈북은 가속화되어진다. 식량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민들의 지리적 이동을 인정하기 시작한 북한주민통제기구들은 상대적으로 이완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제2경제 부문에서의 상거래는 점차 일상적이고 적극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는 시장 지향적 개혁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실제 제도적으로는 경제체제의 개혁을 시도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적 구조 등에 문제가 있어 탈북의 행렬은 불가피하게 증가되어질 것이며, 이들 중 일부는 남한으로 지속적으로 흡수되어져 갈 것이다. 남한에서도 1998년 김대중정부에서 소위 햇빛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시각이 이데올로기적·정치적인 이용의 관점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바뀌고 제반 관련시행령 및 제도를 개정하여 새로운 접근을 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징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2) 탈북경로의 변화

1990년대 이전의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시점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1990년이전의 탈북 루트는 휴전선 일대를 통해 귀순하는 것이 보편적 형태였다. 이는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는 북한과 밀접한 양대 공산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 남한 정부가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관련성도 없었기 때문에 남한으로 귀순하려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대안이 없이 휴전선을 통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탈출경로였고 간혹 해상이나 항로를 통한 귀순이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귀순자의 대부분이 휴전선에 근접한 인민군 소속의 군인들이었으며 보편적인 일반주민들은 탈출욕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는 힘든 환경적 상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소련의 변화로 시작되는 냉전체제의 붕괴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남한은 1989년 헝가리와 정식수교를 시작으로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수교하는 등 모든 공산권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갖게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긴밀히 관련되는 중국과 러시아 경우에도 이들 국가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포기하거나 내적 변화를 피하게 됨으로써 남한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어 주요 탈출경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가간 경제교류가 이루어져 민간 경제인들도 '서해안시대'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활발한 진출을 시도하게 된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남한경제인들과 접촉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게 되고 탈북의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주민들이 남북한 사회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갖게 하며, 북한 사회 자체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기회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북한의 내부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 이상 휴전선 일대를 통한 기존의 경로가 아닌 제3국의 외교적 거점을 통한 귀순형태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넘거나 러시아의 별목현장으로 탈출하여 남한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탈출루트가 가능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탈출 경로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은 1990년 이후 1998년 10월 현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본 탈출경로인데 1960년대에는 한반도를 경유한 경우가 약 94%, 70년대에는 약 80%, 80년대에는 약 37%로 점차 줄어들다가 90년대에 와서는 약 14%정도만 분포되고 오히려 제3국 경유가 약 8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0년 이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탈출경로가 매우 다양해 졌을 뿐 아니라 한반도를 통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국체류(외화별이, 유학, 외교 등 공무수행)중에 심경의 변화로 망명하거나 북한을 직접 탈출하여 중국·러시아 등을 경유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특히 탈북하여 제3국에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제3국 정부에 신청하거나 혹은 제3국 내 한국 대사관이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등에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가 탈북자에 관하여 한국 정부의 불간섭 입장을 공식 표명한 이후에는 특히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UNHCR이나 국제적십자사 등을 통한 입국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한 입국시에도 난민부여³⁾의 입장에 정확한 기

3)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난민지위 부여 기준은 1951년 난민협약서와 1967년 난민 의정

준 확인이 불명확하여 쉽게 허가되지 않는 실정이다.⁴⁾

이제까지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형법 제47조⁵⁾에 의해 처벌의 위험이 명백하므로 국제법상 난민(refugee)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였다. 그러나 한편 북한에서도 1996년말 이후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탈북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처벌을 완화하여 왔고, 탈북자 송환과정상 비인도적 처우도 상당부분 개선되었기 때문에 탈북자를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규정된 엄격한 의미의 난민(mandate refugee)으로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식량 확보 목적이 아니였거나, 특히 남한으로의 탈출과정에서 송환되는 경우는 참혹한 처벌을 당하는 실정이므로 북한주민의 난민지위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한다. 현실적으로 난민판정은 현지국의 주권 사항이며 다만 현지국이 요청하거나 난민판정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일 경우 UNHCR이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에 따라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계층·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로 인해 자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거나 자국의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국적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자”이다.

- 4) 난민부여에 있어 신원조회 및 신분확인이 되면 난민으로 인정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남한으로의 망명을 허가하고 있으나 실제 북한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구입을 목적으로 한 탈북으로 간주될 경우 망명허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5) 북한형법 47조는 “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 반역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남한 이주 경로⁶⁾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자국	육상	42 (64.6)	11 (73.3)	10 (20.4)	13 (4.1)	
	해상	동해				1
		서해				24
		남해				0
계	18 (27.7)	1 (6.7)	7 (14.3)	25 (7.9)		
	공중	1 (1.5)	0 (0.0)	1 (2.0)	1	
제3국	중국/홍콩				143	
	소련/유럽				87	
	아시아				42	
	미주				1	
	계	4 (6.2)	3 (20.0)	31 (63.3)	273 (86.4)	
계		65 (100.0)	15 (100.0)	49 (100.0)	316 (100.0)	

통일원, 1994, 1998.

3) 탈북동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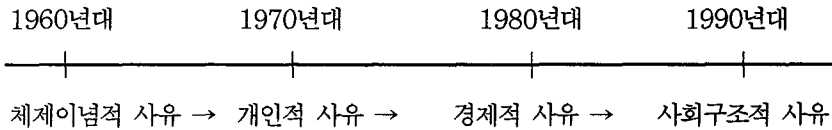
탈북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동기가 아닌 경우 대체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경제여건 및 체제의 특수성은 이들의 안정된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대안으로서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착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서의 난민규정은 민간차원뿐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 동기의 경우는 특히 시기별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일원의 조사(1994)에 의하면 1960년대에는 '남한체제와의 비교인식', '체

6) 남한이주 경로 도표 중의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의 분포는 정부 수립 후 1993년까지 귀순한 700명의 탈북자 중 순수귀순자 209명을 대상으로 한 1994년 통일원의 조사중 (단, 50년대 180명, 사망 및 이민 170명, 검거 및 자수전향 등에서 순수귀순자로 분류하기 힘든 150명 제외)에서 나온 자료이며 이 조사 중 1990년대의 분포는 제외시키고 대신 1998년 통일원의 1990년대 이후 이주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분포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체불안' 등 이념적 이유에서 북한을 탈출한 경우가 72%정도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보다 개인적 이유에서 탈북한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는 탈출동기 중에서 경제·사회적 생존권의 확보를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는 탈출동기 중에서 경제·사회적 생존권의 확보를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표 2〉 탈북 동기의 시기별 변화 추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의 변화추세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개별적 사유로 탈북이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1960년대까지는 주로 개인적인 체제불만 및 남한사회와의 비교인식이 원인이 되었고 1970년도에는 탈북의 시도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다가 1980년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개별적인 사유가 다양하게 나타나 범죄 등으로 처벌을 우려하거나 불륜, 동반귀순 등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좀 더 정확히 1994년도 이후부터는 개별적 사유라고 보기 힘든 공통된 원인, 즉 북한 사회의 식량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사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는 북한이탈 남한이주자뿐만 아니라 탈북하여 국경지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의 현황을 고려할 때 뚜렷이 대별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는 주민들이라도 대체로 체제에 대한 반항이나 원망은(탈북 재외동포의 경우)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북한체제내에서 식량구입을 위해 탈북하는 경우 그 처벌을 악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해 나가는 현상을 볼 때 북한 정치체제 및 사회구조적인 변화 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징의 변화

2000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406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중에 사망 186명, 이민 33명을 제외하고 국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총 1,187명으로 나타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공식적 통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연도별 북한 이탈주민의 수

시 기	인 원	누 계	비 율
1969이전	485	485	30.4
1970 ~ 1979	59	544	3.7
1980 ~ 1989	63	607	3.9
1990	9	616	0.6
1991	9	625	0.6
1992	8	633	0.5
1993	8	641	0.5
1994	52	693	3.3
1995	40	733	2.6
1996	56	789	3.5
1997	86	875	5.3
1998	71	946	4.4
1999	148	1094	9.3
2000	312	1406	19.6
2001.5	188	1595	11.8
계	1595	1595	100.0

통일부 인도지원국, 2001. 5. 31

남한에 이주해온 북한이탈주민의 수의 특징을 <표 3>에서 보면 시계열적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 경제사정에 별무리가 없고 남한 대비 우월적 입장을 갖고 있던 시기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88년 독일 통일과 러시아의 사회주의 붕괴로 시작한 동구권의 변화는 북한의 입지악화를 가져오게 하고 다양한 형태로 탈북주민의 수를 증가시킨다. 남한으로 이주해 온 탈북 주민외에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제3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북

한주민까지 '탈북주민'으로 규정한다면 수적인 면에서도 재평가가 요구된다. 즉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현황을 통일원에서 1999년 잠정 집계한 숫자만 보더라도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3000명 정도(민간연구기관은 약 10만~40만명), 러시아의 건설 및 벌목공 출신이 200~300여명, 기타 국에 한국행을 위한 경유지로 소수의 인원이 간헐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러시아는 체류를 묵인하거나 UNHCR을 통해 한국행을 협조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약 700명 선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들어오지 못하고 현지에서 은신,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고 있다. 남한에 이주해온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도 <표 3>에서 보듯이 1990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1994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증가추세는 1997년까지 지속되다가 1998년부터 다시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남한사회의 소위 IMF시기라 불리는 경제위기에 따른 남한정부의 선별적 수용이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1년 현재 총 1,595명이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표 4〉 1990년 전후의 일반적 사항

		1990이전	1990이후	계
성 별	남성	563 (92.6)	318 (76.3)	881 (86.0)
	여성	44 (7.3)	99 (23.7)	143 (12.0)
연 령	10세 미만	0 (0.0)	24 (5.8)	24 (2.3)
	10대	107 (17.6)	29 (7.0)	136 (13.3)
	20대	289 (47.6)	127 (30.5)	416 (40.6)
	30대	127 (20.9)	151 (36.2)	278 (27.1)
	40대	57 (9.4)	39 (9.4)	96 (9.4)
	50대	22 (36.2)	28 (6.7)	50 (4.9)
	60대 이상	5 (0.8)	19 (4.6)	24 (2.3)
출 신 성 분	별목공 및 노동자 군 인	94 (15.5) 244 (40.2)	150 (47.5) 22 (7.0)	244 (26.4) 266 (28.8)
	해외거주자	3 (0.5)	23 (7.3)	26 (2.8)
	당원 및 교사	11 (1.8)	38 (12.0)	49 (5.3)
	학생 및 무직	113 (18.6)	82 (25.9)	195 (21.1)
	자수간첩전향	142 (23.4)	1 (0.3)	143 (15.5)
	가 족	가 구	1 (12.5)	51 (23.6)
구 성 원		7 (87.5)	165 (76.4)	172 (76.9)

통일부 인도지원국, 1999

〈표 4〉에서 성별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보면 1990이전에는 남성이 약 93%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여성의 수가 증가하여 남성은 약 76%, 여성은 약 2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단독 탈북은 거의 드물고 가족동반 이탈의 증가추세의 결과 여성탈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1990년 이전 즉 1989년까지는 10세미만은 전혀 없고 20대가 약 48%로 가장 많으며 50대 36%, 30대 21% 정도로 분포되어 있고 60대 이상은 1% 미만의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30대가 36%, 20대가 31% 정도로 높은 분포를 보이며 10세 미만도 약 6%, 60세 이상도 약 5% 정도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포 현황도 가족동반 탈북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1990년을 전후하여 탈북해 온 북한이탈주민의 특징 변화 중 가장 주목

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가족 동반 탈출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가족 동반의 사례 증가는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원활히 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특히 심리사회적 안정의 측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사회적응에 있어서 탈출하기전 사회내에서의 출신성분에 따라 이주한 사회에서의 적응,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윤인진, 1998) 북한에서 출신성분은 1990년을 전후한 탈북 주민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이전에는 주로 군인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자수간첩 및 전향한 사람이 약 23%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에는 별목공 등 노동자가 약 47%이며 학생이 약 26%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 이후에는 당원 출신자와 해외거주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군인 및 자수간첩 등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 북한에서 지내던 거주지역 간에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 이전에는 평안도가 약 26%로 가장 높고 휴전선 부근인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지역이 약 30% 정도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에는 평양의 경우가 약 27%로 가장 높아 계층적인 면에서 중·상류층 부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휴전선 부근의 지역은 약 19%로 군사 분계선에서 이탈하는 군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인 함경도 부근의 탈출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지역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보아서 남한 정부의 선별적 수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보면 1990년대를 전후하여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출신성분, 직업 등에 따라 변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남한 생활에서의 욕구의 변화와 적응형태의 다양화를 가져오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욕구의 파악은 이들의 만족도 및 적응상태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절에서는 1990년 이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남한 생활에서의 경제·사회 심리적 욕구형태를 알아보고 욕구의 만족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Ⅲ. 199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욕구(need)와 지원

1. 남한에서의 만족현황과 지원정책

본 장에서는 199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남한 생활에서의 만족도와 이를 결정짓는 주요변수인 정부의 지원정책을 연결하여 알아보고,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주요욕구(need)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욕구와 만족도의 현황은 주로 1998년 조사시점까지의 총 입국자 328명 중 유아·사망·미배출자 등은 제외하고 국내 거주자 286명이 대상이 되었다. 이중의 응답 해은 219명을 대상으로 통계처리 하였다.⁷⁾

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에서의 만족현황

(1) 남한 사회생활의 만족

전반적인 남한 생활에서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의 적응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에서의 거주기간, 연령, 가족형태 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를 알아보고 민간 단체 및 개인의 도움여부 등 가까이에서의 지지 요인과 채무 유무 등 경제적 요인에 따른 남한 생활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7) 총 대상자는 1949년부터 1998년까지 입국자였다. 응답은 총 239명에게 받았으나 1969년까지 18명이었고 1970년대 1980년대까지의 입국자는 1명도 응답자가 없었으며 1990년대 이후 응답자가 22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본 분석은 1990년대 이후 입국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응답의 내용과약이 거의 불확실한 2명을 제외시키고 총 219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 5〉 남한 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	대체로 만족못함	매우 만족못함	계
입국년도	90	0 (0.0)	3 (100)	0 (0.0)	0 (0.0)	3 (100.0)
	91	0 (0.0)	6 (85.7)	1 (14.3)	0 (0.0)	7 (100.0)
	92	0 (0.0)	2 (66.7)	1 (33.3)	0 (0.0)	3 (100.0)
	93	1 (20.0)	2 (40.0)	2 (40.0)	0 (0.0)	5 (100.0)
	94	6 (18.2)	11 (33.3)	12 (36.3)	4 (12.1)	33 (100.0)
	95	3 (13.0)	8 (34.8)	11 (47.8)	1 (4.3)	23 (100.0)
	96	1 (2.9)	12 (35.3)	17 (50.0)	4 (11.8)	34 (100.0)
	97	13 (18.8)	40 (58.0)	14 (20.3)	2 (2.9)	69 (100.0)
	98	2 (10.5)	10 (52.6)	5 (26.3)	2 (10.5)	19 (100.0)
	계	26 (13.3)	94 (48.0)	63 (32.1)	13 (6.6)	196 (100)
연령	20세미만	1 (12.5)	5 (62.5)	2 (25.0)	0 (0.0)	8 (100.0)
	20대	5 (13.9)	21 (58.3)	5 (13.9)	5 (13.9)	36 (100.0)
	30대	7 (7.6)	41 (44.6)	38 (41.3)	6 (6.5)	92 (100.0)
	40대	3 (8.8)	19 (55.9)	11 (32.4)	1 (2.9)	34 (100.0)
	50대	4 (25.0)	6 (37.5)	5 (31.2)	1 (6.3)	16 (100.0)
	60세이상	5 (45.5)	4 (25.0)	2 (18.2)	0 (0.0)	11 (100.0)
	계	25 (12.7)	96 (48.7)	63 (32.0)	13 (6.6)	197 (100.0)
채무	있다	4 (8.9)	13 (28.9)	21 (46.7)	7 (15.6)	45 (100.0)
	없다	18 (13.6)	75 (56.8)	33 (25.0)	6 (4.5)	132 (100.0)
	계	22	88	54	13	177 (100.0)
민간단체 개인도움	받았다	7 (12.1)	39 (67.2)	10 (17.2)	2 (3.5)	58 (100.0)
	안받았다	13 (11.5)	43 (38.1)	47 (41.6)	10 (8.8)	113 (100.0)
	계	20 (11.7)	82 (48.0)	57 (33.3)	12 (7.0)	171 (100.0)
가족형태	단독	5 (16.1)	15 (48.4)	10 (32.2)	1 (3.2)	31 (100.0)
	복합	12 (12.8)	47 (50.0)	29 (30.9)	6 (6.4)	94 (100.0)
	계	17 (13.6)	62 (49.6)	39 (31.2)	7 (5.6)	125 (100.0)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한국생활 만족도 분포를 보면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약 61%, 불만족의 경우가 약 39%로 분포되었다. 이는 뒤의 〈표 7〉에서 본 정부지원 정책의 만족도 분포결과인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과 대비해서 양호한 편이지만 매우 만족한다는 약 13%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정책에는 입국전에 기대했던 것에 비해 실망하는 편이지만 전반적인 한국생활에서는 대체로 불만족하기보다는 만족하는 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한국생활 만족도에 관하여서 보면 20대의 경우 만족하는 경우가 약 72%이며 30대는 약 52%, 40대는 약 65%, 50대는 약 62% 정도로 나타났다.

남한에서의 거주기간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입국한 기간이 길수록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독으로 지내거나 가족 등과 함께 지내는 것과 남한 생활에서의 만족도와는 큰 연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채무 유무별로 한국생활 만족도에서는 채무가 있는 경우 대체로 만족하지 못함이 약 47%이며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약 62%이다.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로 만족함이 약 57%로 가장 높으며 매우 만족함까지 합하면 약 76%로 나타나서 채무가 없을 수록 전체적인 한국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 및 개인의 도움이 한국생활 만족도에 기여하는 측면을 보면 민간단체 및 개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 대체로 만족이 약 67%,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약 79%이며, 도움을 안 받은 경우는 반대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 못함이 약 42%로 가장 높고 만족 못하는 경우가 모든 약 51%로 분포되었다. 이 경우에도 민간단체 및 개인의 도움이 있는 경우일수록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남한 생활의 어려운 점

	빈 도	분 포
돈 버는 것	53	27.9
취업	38	20.0
남한사람과의 관계	33	17.4
언어	20	10.5
생활습관	12	6.3
외로움	34	17.9
기타	22	11.6
계	190	100.0

남한 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꼽은 것 중 돈버는 일이 가장 많아 약 28% 정도이며 취업이 20%로 나타나 경제 생활과 관련 된

것이 거의 절반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는 외로움 18%, 남한사람과의 관계 17% 등의 순이다. 언어와 생활습관 적응의 어려움도 각각 11%, 6%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한국생활의 어려운 점 중 기타의 의견으로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국민과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차별되고 있음과 탈북자간의 차별대우가 빈부의 격차를 느끼고 있음을 어려운 점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육체적으로 안정되지 못함, 공부가 힘들, 건강의 약화, 북한 경력이 인정되어지지 않음, 북한 가족과 고향에 대한 죄책감, 해외 출국 제한 등을 힘든 요소로 열거하고 있다.

(2) 정착지원의 만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에서의 욕구충족을 초기 정착지원제도의 만족도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만족도를 <표 7>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가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약 11%,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약 28%로 나타나 대체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정착지원 만족도 분포를 보면 본격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한 94년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가 10%, 만족하지 않는다는 약 77%로 분포되고 95년 매우 만족한다는 4%정도이나, 만족하지 않는다는 약 71%로 나타났다. 97년에는 매우 만족한다가 15%, 만족하지 않는다는 50%정도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기복이 보이는 하나 입국기간이 길어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 만족도와 관련하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관련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1993년 6월의 '귀순 북한 동포 시행령'은 초기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후 94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불만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1996년에 다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노출되는 불안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개정법'을 제시하게 되며 이것으로 97년 이후 불만족의 정도가 다소 낮아짐을 발견할 수 있다. 1998년 11월에 정부는 다시 기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시불 형

태의 지원금을 약속하고는 있으나 일회용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표 7〉 입국년도별 정착지원 만족도⁸⁾

		매우 만족한다	어느정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계
입국연도	90	0 (0.0)	1 (100.0)	0 (0.0)	1 (100.0)
	91	2 (28.6)	3 (42.9)	2 (28.6)	7 (100.0)
	92	0 (0.0)	2 (66.7)	1 (33.3)	3 (100.0)
	93	0 (0.0)	2 (50.0)	2 (50.0)	4 (100.0)
	94	3 (10.0)	4 (13.3)	23 (76.7)	30 (100.0)
	95	1 (4.2)	6 (25.0)	17 (70.8)	24 (100.0)
	96	3 (8.8)	5 (14.7)	26 (76.5)	34 (100.0)
	97	9 (14.5)	22 (35.5)	31 (50.0)	62 (100.0)
	98	2 (9.5)	8 (38.1)	11 (52.4)	21 (100.0)
	계	20 (10.7)	53 (28.3)	114 (61.0)	187 (100.0)
민간·개인 도움	있다.	7 (12.3)	25 (43.9)	25 (43.9)	57 (100.0)
	없다	11 (10.0)	24 (21.8)	75 (68.2)	110 (100.0)
	계	18 (10.8)	49 (29.3)	100 (60.0)	167 (100)
주택형태	자가	3 (42.9)	3 (42.9)	1 (14.3)	7 (100.0)
	공공임대	2 (5.9)	12 (35.3)	20 (58.8)	34 (100.0)
	영구임대	7 (6.6)	21 (19.8)	78 (73.6)	106 (100.0)
	전세	3 (16.7)	11 (61.1)	4 (22.2)	18 (100.0)
	월세	2 (100)	0 (0.0)	0 (0.0)	2 (100.0)
	기타	3 (33.3)	3 (33.3)	3 (33.3)	9 (100.0)
	계	20 (11.4)	50 (28.4)	106 (60.2)	176 (100)

민간단체 및 개인의 도움여부와 정착지원 만족도 간에는 민간 및 개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 정착지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별 정착지원 만족도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약 74%로 월등히 높고, 공공임대도 약 59% 정도로 나타났으며, 자기소유 주택의 경우는 14%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소유 주택의 경우 매

8) 만족도의 분포배열을 통일부 조사 설문지에서 3분류를 하였으며 등급간격의 적절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삭제할 수 없었고, 수정도 불가능하였다.

우 만족하는 분포가 43% 정도로 나타나 정착지원 만족에 주택 소유가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불만족과 관련된 이유를 보면 지원금이 적다가 약41%로 가장 많고 취업이 안된다가 23% 정도이며 보조금 지급을 차별한다가 15%, 주택알선이 안된다가 약 10%로 나타났다. 대부분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사회적응을 위한 조치를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착지원 불만족 이유 중 기타의 경우를 보면 돈보다는 생활 능력을 키워주기를 바라며, 각 가정이나 개인에 맞는 개별적 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일시금과 더불어 일상 생활 지원을 보충해 주기를 원하며, 지원 수준을 90년 이전 귀순용사법에 근거한 지급을 하여 형평성이 맞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통일부 조사에서 정착지원의 개념을 '경제' 영역에 국한하여 카테고리를 선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역할 개념을 암암리에 경제 문제에만 테두리를 정해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게 한다. 정부의 역할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영역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분담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초기 지원제도의 시기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1990년 이후의 지원제도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8>에서 개괄적인 정부의 지원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정부의 지원제도의 특징을 1990년대 전후로 나누어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식 관련 입법이 제정된 1962년부터 1989년까지의 국내 입국자수는 290명으로 연평균 10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했으며 1990년부터 2001년 5월 현재까지는 988명으로 연평균 약 82명씩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997년 이후에는 연 평균 161명이 입국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지원관련법은 62년 이전까지의 월남 귀순자에 대해서 특별한 법적 조건없이 군안보기관에서 관리지원하였으나 62년부터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되어진다. 이

당시 주무부서는 원호처이며 월남한 귀순자를 1년동안 조사한 뒤 사회로 내보내었다. 이것은 1974년 「국가유공자 및 특별원호법」으로 개정되며 주무부서 및 지원책 등 주요내용은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1978년 12월 법률 제3156호로 「월남 귀순용사 특별 보상법」이 제정되어 보다 체계화 되어진다. 주무부서도 초기 원호처에서 귀순용사의 관리 및 업무를 지원하였으나 1984년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국가보훈처에서 이를 담당하게 된다.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북한 이탈자들은 귀순용사로 간주되어 국가 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영역에서 남한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한편 이는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적응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즉 남한사회의 평범한 시민으로 적응했다기 보다는 남한사회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국외자로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8〉 정부 지원제도

기간	1990 이전		1990 이후		
	1962~1977	1978~1989	1990~1996	1997~2001.5	
관련법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62.4)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78,12)	귀순북한동포보호법 ('93,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97,7)	
국내입국자 수	227명(연평균 14.1명)	63명(연평균 5.3명)	182명(연평균 26.0명)	804명(연평균 160.8명)	
	290명(연평균 10.4명)		988명(연평균 82.3명)		
관련부처	원호처	국가보훈처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지원 내용	고용	직업훈련 취업보호-의무고용 및 특별임용	직업훈련 취업보호-의무고용 및 특별임용	직업훈련 취업-특별임용(본인)	직업훈련 취업-특별임용(본인) 취업보호제도입(2000년 시):3년까지 취업보장, 고용지원금제
	소득	특징-정착금 지급, 50만원~100만원 거택보호	특징-정착금대폭증액 1,900만원~1억5000만원 거택보호	특징-정착금대폭축소 860만원~1500만원 거택보호	특징-정착금축소·증액 2,760만원('98,12), 사회보장제도의특례편입 거택보호
	주택	무상제공-50평 이상	무상제공-15평 이상	무상임대보증금: 840만원~1,200만원 우선임대 및 분양	무상임대보증금: 940만원~1,500만원 우선임대 및 분양
	의료	의료보호 : 귀순자 및 가족	의료보호 : 귀순자 및 가족	의료보호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	의료보호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
	사회 복지 서비스	교육지원 : 귀순자 및 가족 사회적응교육	교육지원 : 귀순자 및 가족 사회적응교육	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 본인 사회적응교육, 북한이탈주민협의회	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 본인 사회적응교육, 시설보호(정착지원시설 하나원-'97,7) 지역담당관제('99,8),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정부출연법제회(2000년)

통일부(인도지원국), 1999.10, 1999.7, 1998
민족통일연구원, 1996

1990년대에 들어서면 앞 절에서 본대로 냉전체제의 와해와 남한과 사회주의권과의 우호적 관계 및 개방 흐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제공해왔던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대규모 북한이탈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객관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1993년 6월 법률 제4568호로 「귀순 북한 동포 시행령」이 제정되어 기존의 북한이탈자에게 제공하던 물질적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자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며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1994년 이후 러시아 별목공의 집단 귀순을 계기로 지원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기존정책을 전면 검토하여 남한사회정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졌다. 즉, 물질적 지원을 위주로 하던 기존정책에서 벗어나 체계적응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 북한이탈주민이 독자적인 능력으로 남한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주어졌다. 이러한 배경하에 1997년 7월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물질적 지원 외에 북한이탈자의 보호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경력 등을 인정하는 등 남한 생활의 전반적 적응을 고려하고 있다.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업무의 통합을 위해 통일원이 주무부서가 되고 타부서와 협의 조정역할을 해나간다. 즉, 국내입국(외무부) → 귀순 직후 보호관리(안기부) → 생활보호(보건복지부)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교육부+노동부) → 사후관리(경찰) 등 업무분담을 하나 전체적인 보호 관리업무는 통일부로 일원화되어 있다. 또한 통일부 산하에 ‘북한탈출주민 대책협의회’를 두고 보호여부 결정, 정착지원의 중지, 종료, 보호기간의 단축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의 이탈주민의 관련정책들을 협의 조정하며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 시설을 마련하고 보호관리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적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정착지원시설에서 3개월, 거주지에서 2년간 보호하고 있다. 정착지원시설의 경우 경기도 안성에 1999년 7월 부지 8천평, 건평 2천 5백평 규모로 개원하였으며 약 1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사회의 기본규범과 행동규범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점은 개정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성별 연령에 따라 6개월 이내 기간동안 기본소양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1년 이내 기간동안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국내정착을 위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물질적 지원은 이전과 대동소이하며 교육 지원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비전액면제, 대학은 2년 면제, 사립대는 반액을 지원한다. 여섯째, 안정적인 직장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에 공무원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일곱째,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따른 애로사항을 지방자치 단체장, 공익법무관, 사회복지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여덟째, 모든 보호 및 정착지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여 부족액을 추가로 교부하거나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있다. 아홉째,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한다. 1997년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책의 정부입장에서의 주요방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단순 사회적응이 아닌 남북한 사회통합의 시험무대로 삼아 통일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하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조치의 마련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및 지역사회 적응체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과 관련해서 62년 및 78년의 법에서는 귀순자의 취업을 특별임용 외에 의무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과 자녀를 포함하여 5인까지 직장을 알선해주고 있다. 그러나 90년도에 들면서 특히 1994년 러시아 별목공의 집단귀순을 계기로 지원규모를 대폭삭감하고 기존정책을 전면 검토하여 남한사회정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졌다. 즉, 물질적 지원을 위주로 하던 기존정책에서 벗어나 체제적응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 북한이탈주민이 독자적인 능력으로 남한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주어졌다. 93년 법에서는 의무고용제를 폐지하고 특별임용으로만 대체하게 되며 취업알선도 귀순자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적용하며, 교육법 81조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 단체에 취업을 요청할 수 있고 요

청받은 기관은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에서 우선 채용하도록 되어있다. 1997년 법에서도 의무고용제는 없이 특별임용을 하게 되는데 북한이탈주민 보호차원에서 취업보호제를 실시한다. 취업보호제는 하나원 정착시설 및 거주지 보호기간인 3년동안 취업보호기간을 한정하여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취업보호제도에 근거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력에 있어서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임금의 50%(대기업은 40%)를 1년 내지 3년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의무를 이행치 않은 사업주는 일정액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62년도 법에서는 정착수당의 경우 3급으로 나누어 1급은 100만원, 2급은 70만원, 3급은 50만원으로 차등지급하며 직장알선, 국공립 주택우선 입주권배정, 양로 및 양육지원을 하게 된다. 78년도 법에서는 지원책으로는 귀순용사는 신분 및 정보제공의 공적에 따라 황금 1,900g~14,500g의 보상금을 제공하며 휴대장비의 유형에 따라 10g~807,700g까지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약 1,9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에 해당된다. 또한 본인, 배우자, 자녀는 대학까지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준하여 교육혜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93년도 법에서는 대폭 삭감되어지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정착금은 단독귀순자의 경우 월최저임금의 20배, 2인 가족도 월 최저임금의 30배, 3인 이상의 경우는 월최저임금의 40배를 지급한다. 이는 약 860만원에서 1,500만원에 해당된다. 가산금도 월최저 금액의 60배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보조금은 휴대장비 및 정보가치에 따라 황금 10g~2,000g까지 보상하고 있다. 이것이 98년에 약간 증액되어 2,760만원으로 되어진다. 특히 조세감면특례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기간동안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2년동안 세금감면혜택(소득세)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주택지원의 경우를 보면 62년 법에서는 50평 이상의 주택을 무상제공하였고 78년 법에서는 아파트의 보급으로 15평 이상을 무상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93년도 법부터는 무상제공이 삭제되고 임대보증금을 840만

원~120만원 지급하고 있다. 이것도 98년에 2,760만원으로 약간 증액되어진다.

지역사회 내에 들어와서 실제생활을 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최저생활을 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 9〉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평가액(원)	55만원	76만원	96만원	109만원	123만원	추가가구1인마다13만원씩증가
재산(실거래가)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보건복지부, 2001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범위 중 기타 타 법률 등에 의한 급여 대상자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거주지 전입 후 5년의 범위내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은 <표 17>의 소득평가액 기준이하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를 보면 1993년 이전의 법률에는 사회적응교육을 입국초기에 제공하고 있으나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에 초점을 두고 통일대비 차원에서 이들의 전반적 사회적응을 고려하면서 이 부분의 서비스가 강화되기 시작한다. 여기서는 특히 1999년 7월부터 정착지원시설보호(하나원)를 3개월로 의무화시키면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에 대한 정부출연을 공식화하여 현재 민간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에 대해 정부출연을 명문화하여 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교부해 나가는 것이다. 재단법인의 성격으로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기부금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한다. 종합생활상담센터를 운영(1999,5)하면서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자매결연지원, 대학생 자원봉사대를 운영

실시하고 있다. 거주지 편입지원으로는 주민등록 발급등 신분안정을 지원하고 정착금 지원 등으로 초기 생계기반 마련, 취학 및 편입학 지원 및 취업알선, 민간 종교단체와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있다. 사회편입후 사회적응을 보면 경찰을 통한 신변보호(2년) 전담관제를 운영하며 거주지 보호 담당관제를 도입(1999.8시행)하고 있다. 이는 시·도 및 거주지 보호 담당관 지정, 의료보호·생활보호·교육지원·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자립·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과 사회복지관과의 연계 및 민간지원단체와 결연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적응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초기생활 적응의 안정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초기지원제도가 마무리되면서 초기지원을 토대로 장기적 자립이 가능해져야 정책의 효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아직은 정부의 초기 지원제도가 장기적 자립과 적응의 발판이 되고 있지는 못하며 이러한 연결고리의 마련이 우선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에서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과 밀접하고 적절한 도움이 필수적이다. 커다란 골격의 복지정책의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 국가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정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의 도움을 민간단체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영역임이 나타났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편입되어 있는 분포는 남한주민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편입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문제는 정부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과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자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정부의 초기지원정책 이후에도 입국초기의 안정된 상태 이상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기본 시각 정립과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노력이 요구되어지며 이를 위한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 욕구(need)의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에서의 주요욕구의 현황을 일반적 사항, 취업 및 소득 주택, 건강, 가족 및 사회생활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일반적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입국 연도별 북한이탈 주민의 수를 보면 1994년 이후 수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가족구조별 성별분포를 보면 단독세대의 경우 여자는 전혀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복합세대의 경우는 여자가 약 35%, 남자가 약 6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복합세대가 단독세대보다 약 3배정도 많은 것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단독세대도 약 24%정도로 나타나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남한에서 혼자 지내는 북한이탈주민도 상당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은 북한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배려할 때 이들에 대한 고려를 다각도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결혼상태별 성별 구조를 보면 미혼은 약 51%, 기혼이 약 49%이다. 특히 기혼에 있어서 동반 입국한 경우 남자는 약 58%, 여자 42%인데 입국 후 결혼한 경우에 여자는 전혀 분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결혼 변수와 가족구조 분포를 종합해 볼 때 여성의 경우는 단독으로 월남한 경우는 없으며 모두 가족 등과 함께 동반 입국한 것을 알 수 있다.⁹⁾ 본 통계조사에서는 잡히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미혼여성 단독 월남의 경우가 간간히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9) 본 연구자의 「북한 여성과의 대화모임」(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개별 면담에도 1명 - 1997년 입국)이 포함되고 있다.

〈표 10〉¹⁰⁾ 1990년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남	여	계
입국 연도	90	3 (100.0)	0 (0.0)	3 (1.4)
	91	7 (100.0)	0 (0.0)	7 (3.3)
	92	2 (66.7)	1 (33.3)	3 (1.4)
	93	5 (100.0)	0 (0.0)	5 (2.3)
	94	29 (87.9)	4 (12.1)	36 (15.5)
	95	23 (92.0)	2 (8.0)	25 (11.7)
	96	27 (71.1)	11 (28.9)	38 (17.8)
	97	50 (65.8)	26 (34.2)	76 (35.7)
	98	19 (82.7)	4 (17.4)	23 (10.8)
	계	165 (77.5)	48 (22.5)	213 (100.0)
연령	20세미만	10 (50.0)	10 (50.0)	20 (9.3)
	20대	28 (75.7)	9 (24.3)	37 (17.3)
	30대	83 (89.2)	10 (10.6)	93 (43.5)
	40대	28 (82.4)	6 (17.6)	34 (15.9)
	50대	11 (61.1)	7 (38.9)	18 (8.4)
	60세이상	7 (58.3)	5 (41.7)	12 (5.6)
		계	167 (78.0)	47 (22.0)
	평균연령	35.75		
가족 구조	단독세대	33 (100)	0 (0.0)	33 (23.6)
	복합세대	70 (65.4)	37 (34.6)	107 (76.4)
	계	103 (73.6)	36 (26.4)	140 (100.0)
결혼 상태	단독입국	47 (69.1)	21 (30.9)	68 (100.0)
	동반입국	22 (57.9)	16 (42.1)	38 (100.0)
	입국 후 결혼	28 (100.0)	0 (0.0)	28 (100.0)
	계	97	37	134 (100.0)
학력	없음	36 (76.6)	11 (23.4)	47 (38.8)
	초등학교	4 (44.4)	5 (55.6)	9 (7.4)
	중등학교	1 (33.3)	2 (66.7)	3 (2.5)
	고등학교	3 (75.0)	1 (25.0)	4 (3.3)
	대학교	39 (90.7)	4 (9.3)	43 (35.5)
	북한에서 다님	13 (86.7)	2 (13.3)	15 (12.4)
	계	96 (79.3)	25 (20.7)	121 (100)

연령별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아 약 44%이며, 20대 약 17%, 40대 약 16%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가족동반 탈출 증가의 추세로 20대 미만이 약 9% 정도, 60세 이상도 약 6%로 나타났다. 연령

10) 모든 도표의 경우 각 변수별 무응답과 비해당의 경우는 제외하고 도표화 하였다.

별 성별 분포를 보면 30대의 경우 약 89%, 40대는 약 82%, 20대 약 76%, 50대는 약 61%가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10대와 60대가 많아서 각기 50%, 42% 정도이며 30대는 약 11% 정도만 분포되고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약 36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탈북의 주도세력은 30대와 40대의 남성인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 여성과의 대화모임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적으로 보면 50대 이후에 탈북을 주도한 경우는 대체로 자신의 가족 특히 다음세대들 즉 자녀들의 생활안정을 주목적으로 실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고용

(1) 취업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에서 경제력 및 생활력은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일뿐 아니라 남한 생활 적응에 기초적 요소이다. 취업률로 대변되는 고용의 상태를 통해 생활력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취업률 분포¹¹⁾

		직업이 있다	직업이 없다	계
성별	남자	143 (86.1)	23 (13.9)	166 (100.0)
	여자	29 (60.4)	19 (39.6)	48 (100.0)
	계	172 (80.4)	42 (19.6)	214 (100.0)
연령	20대미만	5 (25.0)	15 (75.0)	20 (100.0)
	20대	31 (86.1)	5 (13.9)	36 (100.0)
	30대	82 (88.2)	11 (11.8)	93 (100.0)
	40대	33 (94.3)	2 (5.7)	35 (100.0)
	50대	16 (88.9)	2 (11.1)	18 (100.0)
	60세이상	6 (50.5)	6 (50.5)	12 (100.0)
	계	173 (80.8)	41 (19.2)	214 (100.0)
학력	없음	41 (85.4)	7 (14.6)	48 (100.0)
	초등학교	1 (11.1)	8 (88.9)	9 (100.0)
	중등학교	0 (0.0)	3 (100.0)	3 (100.0)
	고등학교	2 (50.00)	2 (50.00)	4 (100.0)
	대학교	38 (90.5)	4 (9.5)	42 (100.0)
	북한에서 다님	13 (86.7)	2 (13.3)	15 (100.0)
	계	95 (78.5)	26 (21.5)	121 (100.0)
결혼상태	미혼	46 (68.7)	21 (31.3)	67 (100.0)
	동반입국	32 (84.2)	6 (15.8)	38 (100.0)
	입국후 결혼	28 (96.6)	1 (3.4)	29 (100.0)
	계	106 (79.1)	28 (20.9)	134 (100.0)
적용교육	받았다	78 (92.9)	6 (7.1)	84 (100.0)
	받지않았다	82 (81.2)	19 (18.8)	101 (100.0)
	계	160 (86.5)	25 (13.5)	185 (100.0)
취업상담	받았다	27 (87.1)	4 (12.9)	31 (100.0)
	안받았다	97 (88.2)	13 (11.8)	110 (100.0)
	기타	1 (33.3)	2 (66.7)	3 (100.0)
	계	125 (86.8)	19 (13.2)	144 (100.0)
	평균 이직횟수: 3.16회		평균재직기간: 2.8년	

취직률의 경우는 남한 생활에서의 기초여건을 마련해주며 생활력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이다. 취업률 관련 분포를 항목별로 자세히 보면 〈표 11〉과 같다.

11) 취업률의 경우 한국에서의 실업률 측정기준에 준하였다. 즉, 1주일에 1시간이라도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여기에는 강연, 일용직노동 등 불규칙한 수입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성별 취업률 분포를 보면 남자의 경우 약 86%가, 여자는 약 60%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80%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포되었다. 연령별 취업률 분포를 보면 40대의 경우 약 94%, 50대 약 89%, 30대 약 88%, 20대 약 86% 정도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약 51%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갖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생활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학력별 취업률 분포를 보면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율도 높은 분포를 보여 대학 졸업의 경우는 약 91%가 직업이 있었다. 결혼상태별 취업률 분포를 보면 미혼은 약 69%, 기혼의 경우는 평균 약 90%정도가 직업이 있었으며 특히 입국후에 결혼한 경우는 약 97%가 직업을 갖고 있었다. 입국후 남한주민과의 결혼은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응 교육이수 여부별 취업률 분포를 보면 사회적응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약 93%,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약 81%가 직업이 있었다.

취업상담 여부별 취업율을 보면 오히려 취업상담을 안 받고 취업한 경우가 약 88%, 받고 취업한 경우는 약 87% 정도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상담의 역할이 뚜렷하지 못하였다. 취업상담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통한 취업연계의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도표 등으로 언급되어지진 않았으나 조사되어진 변수 중 관련된 결과를 연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을 보면 뚜렷한 공식적 직장없이 강연 노동 등의 불규칙한 일을 통해 수입을 벌고 있는 경우가 1/3 정도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및 은행원은 약 1/4 정도이며, 그밖에 학생, 자영업 등의 순서로 분포되고 있다. 즉 실제로 정규직 직업을 갖고있는 경우는 약 30% 정도 밖에 분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갖고 있는 직업과는 상관없이 갖고 싶어하는 직종을 보면 전문직이 가장 많아 약 1/4이 넘으며, 생산기술직, 서비스직, 사무직의 순서로 나타났다. 갖고 싶은 직종중 기타의 경우에는 자영업이 가장 많았고, 돈이 되면 아무 일이나 하고 싶음, 개인택시, 무역업, 국가관리 기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업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외국의 왕래가 부자유한 상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2) 이직 및 직업 훈련

북한이탈주민의 절반이상은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약 3번의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고, 한 직종에 평균 2년 8개월 정도 재직하였다. 관련 연구 논문에 의하면(안혜영, 2000) 북한이탈주민이 첫 번째로 갖는 직장의 경우 회사원 및 은행원이 거의 절반 정도로 가장 높고, 노동 자영업 학생 공무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직장의 경우도 비슷한 분포이나 특이점은 교수·교사 직업에 분포가 늘어났다. 이는 첫번째 직장 기간에 학업이나 기술을 쌓아 직업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전환 분포와 현재의 직장과 비교해 보면 공무원 및 연구원의 경우는 직업전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영업 및 노동의 경우는 직업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다니는 경우와 다른 직종과 겸업하는 경우가 혼재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직장을 전환한 이유로는 임금이 낮거나, 적성이 맞지 않은 등 내부적인 경우가 2/3 정도이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해고되어진 외적인 변화는 1/3 정도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재 직장분포의 특징을 보면 입국기간이 짧을수록 공무원 및 연구원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입국 후 3년간 국·공기업체에 우선채용을 유도해가는 결과로 보여진다. 학생에 있어서도 정부가 학업보조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결과 입국기간과 상관없이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궁극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자영업 또한 끌고루 분포되어 나타났으며 회사원 및 은행원은 입국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도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겪는 어려움 또한 상당하여 약 2/3 정도가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직장에서 어려움의 종류를 살펴보면 봉급이 적은 것과 복리후생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탈북자로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등을 들고 있다. 기타의 의견을 보면 업무의 어려움, 회사의 불경기, 주위의 색다른 인식(신용과 믿음을 주려하지 않

음) 등이 나타났다.

관련 논문(안혜영, 2000)에서 직업없이 지내는 북한이탈주민이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을 보면, 정착금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고, 종교단체 등 민간영역에서의 지원금이 1/10, 다른가족의 수입이 1/10 정도로 나타났다. 그밖에 강연 및 아르바이트, 국민기초대상수급권자 지원금, 친구도움, 부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직업이 없는 이유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본인 능력의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아서 등으로 응답하였다. 정부의 취업알선이 미흡해서는 약 2%에 불과하였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본인의 지병 때문에 직업을 못 갖는 경우가 많았고 나이가 많거나, 전과자, 남한사회 현실과악이 안되어서, 직업훈련중 등이 나타났다.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상담을 해본 비율은 약 24% 정도이며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약 61%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향상은 이들의 경제 생활 안정에 중요한 작업이며, 취업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 개별성과 기술력을 확보시켜 나가는 일이 기본적이다.¹²⁾

12) 안혜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0), pp. 73~74. 우선 북한이탈주민 중에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분포를 보면 지금이라도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약 59%인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연결 및 개별성과 기술성을 살린 직업훈련의 전개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3) 소득

〈표 12〉 월평균소득분포

	개인별소득	가구별소득
50만원 미만	33 (28.4)	6 (19.4)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50 (43.1)	10 (32.3)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4 (20.7)	11 (35.5)
200만원이상	9 (7.8)	4 (12.9)
계	116 (100.0)	31 (100.0)
북한이탈주민 월평균소득	555,233	
남한 근로자 월평균소득	1,425,797(1998년 기준)	1,732,409(2000년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상태를 통한 경제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월소득 분포를 보면 개인별 소득의 경우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경우가 약 43%로 가장 많고 50만원 미만이 약 2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약 21%이며 200만원 이상은 약 8%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소득 약 56만원은 같은 시기(1998)의 남한 근로자의 월평균소득 약 142만원 정도에 비교하면 39%수준에 불과하다. 직업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라도 소득 분포는 남한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낮아 생활상의 어려움을 짐작하게 한다.

가구별 소득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약 36%로 가장 높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약 32% 정도이며 50만원 미만도 약 19%나 분포되어 있다. 개인별 소득에 비해 약간 높기는 하지만 현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생계 유지 수준의 소득 보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지원은 국민 기초 생활보장의 수급권자 범위중 기타 타 법률등에 의한 급여 대상자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즉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 26 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지 전입후 5년의 범위내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¹³⁾은 다음의 소득평가액 기준이하에 근거하고 있다.

〈표 13〉 소득 상태 분포

	동 산	부 동 산	부 채
없음	14 (21.9)	58 (86.6)	135 (75.8)
1백만원미만	2 (3.1)	1 (1.5)	1 (0.5)
1백만원이상 ~ 1천만원미만	17 (26.6)	1 (1.5)	13 (7.3)
1천만원이상 ~ 3천만원미만	19 (29.7)	1 (1.5)	22 (12.4)
3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5 (7.8)	1 (1.5)	7 (3.9)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6 (9.4)	1 (1.5)	0 (0.0)
10억원이상	1 (1.7)	4 (5.9)	0 (0.0)
평균액	16,404,218	8,860,096	3,666,854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상태를 〈표 13〉에서보면 동산의 경우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약 30%로 가장 많고, 1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은 27%로 나타났다. 동산이 전혀 없다고 한 경우로 약 22% 정도이며 동산의 평균 소유액은 1,64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약 87%로 대다수이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억이상은 6%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재산의 경우 자가 외의 임대보증금 및 전·월세를 포함하여 평균 886만원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경우를 보면 부채가 없는 경우가 약 75%로 과반수를 넘고 있고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약 12%로 가장 높고, 1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은 7%정도이다. 부채의 평균액수는 367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부채를 갖게 된 이유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가장 높아 26%,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21%, 사기를 당해서 19%, 주택 구입을 위해서 11%정도이다. 그외 기타로는 병원비, 탈북과정에서 쓴 돈을 갚기 위해서, 탈북하려고 하는 친인척의 남한행을 돕기 위해서 등이며 또한 교통사고, 결혼자금, 벌금 및 카드 빚 절제된 생활을 못하는 경우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생활 관리 능력 및 자본주의 사회의 이해를 위한 적응훈련 프로그램 등이 요구되어진다.

4) 주택

〈표 14〉 주택 형태

	빈 도	분 포
본인 소유의 집	11	5.3
공공 임대 주택	36	17.2
영구 임대 주택	114	54.5
전 세	25	12.0
월 세	9	4.3
기 타	14	6.7
계	209	100.0
평균주택평수	15.8평	

주택은 남한 생활기반의 초석이 되는 요소이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착의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주택형태는 위의 표와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형태는 영구 임대 주택이 가장 많아 절반이상이 분포되어있고 공공 임대 주택이 약 17%, 전세 12% 순 이며 본인 소유의 집은 약 5%에 불과하다. 본인 소유의 경우 주택가격은 6,400만원이 평균치로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의 평수를 보면, 가장 많은 임대 주택의 경우 평균 15.8평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10평 미만의 경우도 약 9% 정도로 분포되고 있어 주택 환경의 열악성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정부에서 알선해 주는 임대주택에서 살지 않는 분포를 보면 임대료 지불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직장이 멀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살지 않고 있으며 1/10 정도는 더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로 나타났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가족 수(가구)가 많아서, 사업실패로 집을 매매함 등이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종별 주택형태는 회사원, 연구원 등 안정적 직장의 경우에 자기 소유의 집이 높은 분포를 보였고, 거의 모든 직종에서 공공임대 및 영구임대의 형태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세의 경우는 자영업이 가장 높고 회사원, 연구원 등에서도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가 및 전세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대체로 분포되어 있으며, 공공 및 영구 임대인 경우는 불안정한 수입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안혜영, 2000)

5) 건강

〈표 15〉 질병상태 분포

	질 병 을	신체 및 정신장애율
있 다	66 (36.3)	39 (22.3)
없 다	116 (63.7)	136 (77.7)
계	182 (100.0)	175 (100.0)

〈표 15〉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를 보면 질병률의 경우 질병이 있는 경우는 약 36%정도로 나타났고 특히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를은 약 22%로 분포되었다. 참고적으로 질병의 이환 기간을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인 50%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이 30%, 5년 이상 10년 이하, 1년 미만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실제 입국 기간과 질병률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도 상관관계가 없어서 주변의 가족의 도움은 신체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민간단체의 도움 등과도 큰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혜영, 2000)

질병이나 신체 및 정신 장애의 경우 특징은 질환율은 크게 높지는 않으나 실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2개 이상의 중복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은 소화기계 질환으로 위궤양·위염·위장병·대장염 등이 가장 많으며, 심혈관계 질환인 심장질환·협심증·심장병·고혈압 등, 근골격계 질환인 디스크·관절염·신경통·골절타박·골수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중풍 등의 뇌혈관계 질환, 당뇨 등 내분비계 질환이 분포되어 나타났다. 한편 신체 및 정신 장애는 빈도 37case로 전체의 약 17%에 해당된다. 신경증 등의 정신과계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27% 정도이며, 전체 이탈주민의 약 4% 정도로 나타났다.

6) 사회심리적 측면

(1) 가족 및 사회생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과 관련된 특징을 앞에서 보았듯이 1990년 이후 특히 가족을 동반한 집단 이탈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이다. 이는 이 데올로기 등을 포함한 정치적, 개별적 신상의 이유보다는 경제적 궁핍에 따른 집단적 생계문제가 심각한 원인이 되어 탈북행렬이 증가되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가운데 가족관련사항을 가족형태, 배우자, 자녀수 등을 중심으로 파악해 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사항

		빈도	분포
가족형태	부부가족	33	23.7
	2세대가족	100	71.9
	3세대가족	6	4.3
	계	139	100.0
가족원수	1명	33	23.6
	2명	37	26.4
	3명	39	27.9
	4명	26	18.6
	5명 이상	5	3.6
	계	140	100.0
자녀수	없음	85	60.3
	1명	33	23.4
	2명	16	11.3
	3명 이상	7	5.0
	계	141	1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의 존재는 남한 사회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는 2세대 가족형태가 약 72%로 가장 많고, 부부가족이 24% 정도이며, 3세대 이상 가족은 약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가족원수를 보면 3명이 약 28%로 가장 높고, 1명인 경우는 약 24%, 2명은 약 26% 정도로 나타났다. 가족형태 분포와 가족원수의 빈도 분포를 종합해 보면 혈연관계가 아니면서 가족처럼 같이 지내는 경우 혹은 결손가족의 형태로 지내는 경우 등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수의 분포를 보면 자녀가 없는 경우가 약 60%로 가장 많고, 1명은 23%, 3명 이상은 5% 정도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운 점을 들고 있는데, 학과 공부를 따라가기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고, 친구 사귀기, 성적 경쟁 등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의 교육체제와 틀린 점이 많고, 또한 남한에서의 교육열 및 사교육 부담 등으로 학교 공부에서 월등한 성적을 내거나 적응하기가 힘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북한사투리, 외국어 이해 부족 등 언어의 문제는 또 학과 문제뿐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원만하게 지내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그 밖에도 학비조달의 어려움이, 남한사회에 대한 기초적 상식이 부족하고 북한과의 교육방법 차이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IV.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앞 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이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경제·사회·심리적 영역에서의 욕구형태와 남한생활 만족형태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욕구형태가 만족된 상태로의 적응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적 대응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가능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바람직한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원정책과 더불어서 실제 남한생활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14) 1998년 7월 북한 이탈 주민 K씨와의 면담결과 K씨는 현재 강남구 신사동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과 함께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의 교육비로 생활비의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 딸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라면 힘들더라도 일이 생기는대로 하고 싶다고 한다. 지금 딸이 학과 공부가 쳐져서 학원에 보내고 있으며 피아노 교습도 시키고 있다.

영역들에 대한 구체적 서비스의 전개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욕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실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전개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형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1) 사회복지서비스지원의 필요성

(1)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지원확대 요구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 1,595명이 입국하여 약 1350정도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시각 변화 및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규모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탈북자의 특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남자 중심의 청장년층 이외에 여성, 10세 미만의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의 적응의 차원을 떠나서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증가한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계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체계 및 대책이 이루어져야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높은 비중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1년 5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1,595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사망, 이민 등의 사유를 제외하며 1,360명 정도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는 310여 가구 588명인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약 43%가 최저 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약 3.6%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다. 사회적응의 가장 기본이 되고 욕구가 높은 영역이 경제적 안정이고 경제적 측면의 불안정은 사회·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이들 계층의 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확대가 요구되어 진다.

(3) 거주기간이 길수록 남한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짐

앞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안정과 상관없이 남한 사회에 거주기간이 길수록 만족도는 점차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이 경제적 지원중심의 조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회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만족도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이 있을 때 향상되어 질 수 있다.

(4) 교회 등 민간단체 지원과 만족도의 긍정적 관계

교회 및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개발 및 지원은 이들의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5) 결손가족형태에 대한 지원필요

90년대 이후 탈북형태 중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단위의 탈북은 대체로 결손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즉, 손자녀와 부부, 모자가정, 부자가정, 노부부와 아들 및 손자녀등의 형태를 띄는데 이러한 결손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사회복지적 시각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과 함께 온 경우는 일반적으로 적응이 수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남한 사회 적응, 특히 경제적 적응이 별다른 영향을 못하고 있는 결과를 고려할 때, 가족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적응에 긍정적 기여를 서로가 해나갈 수 있는 지원 유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이 부담스러운 체계

가 되어서는 안되며 지지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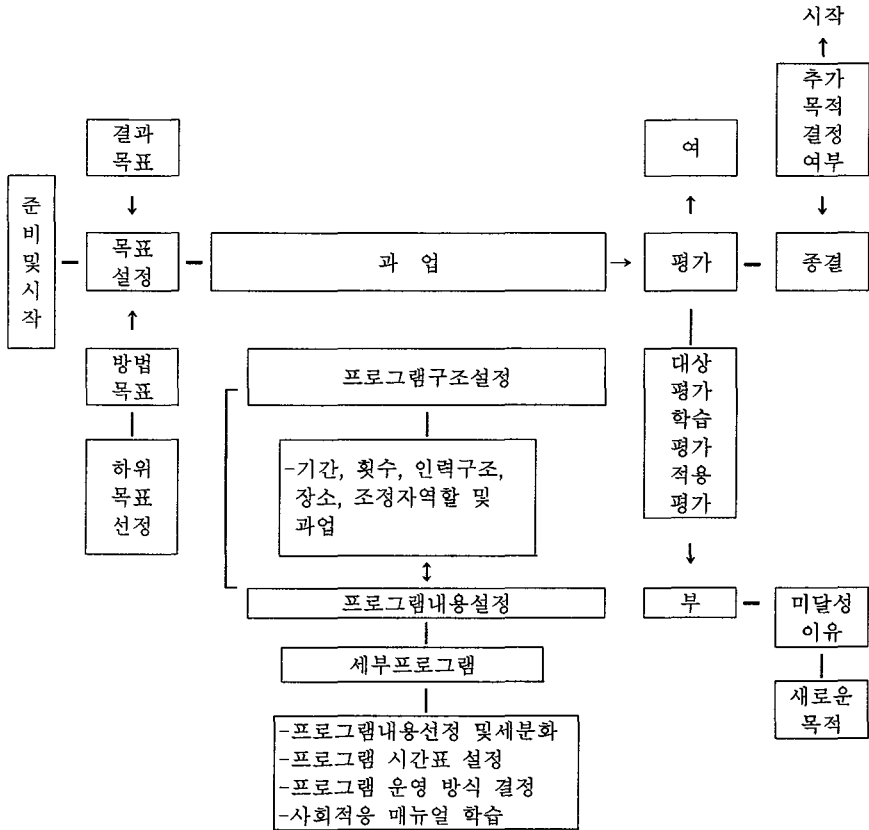
(6) 개별적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요구 - 전담사회복지사의 지도관리

탈북자 거의가 자의적 의도로 탈북을 하였기 때문에 남한에서 잘살아 보고자 하는 의욕도 높고, 실제 높은 생활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비생산계층 연령대의 탈북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탈북자의 평균연령이 36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활지원은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을 개별적으로 세워나가고 지도해 주는 정책으로 정착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남한사회적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의 지원정책은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이 따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탈북자가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한 개인의 적응은 각 영역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고 서로간에 영향을 마치게 된다. 실제 서비스의 통합이 되어질 때 전반적인 남한사회 적응이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개별적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 기초한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전개를 위한 모형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적응은 실제 언어가 다른 국가에서의 이민적응 사례보다 어려움을 갖게 된다. 새로운 사회에서 겪는 이질감과 더불어 50여 년에 걸친 적대감이 누적적으로 심화된 상황에서 적응을 해야하므로 그 어려움은 가중되어진다. 그러므로 적응과정은 보다 체계적이어야 하며 세부적인 역할담당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응 경우는 체계적응과 일상생활의 적응영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사회의 주민이 갖는 공통적 특성이외에 탈북으로 인한 특수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모형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모형은 크게 시작, 목적설정, 프로그램 운영 및 과업, 평가로 나뉘어 질 수 있다.

1) 준비 및 시작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어진다. 하나원에서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게 되는데 하나원은 1997년 12월부터 시설공사를 하여 1999년 5월 총 공사비 121억 원을 들여 완공되어 1999년 7월 8을

개원하였다. 부지 18,000평, 연건평 2,200평, 100명 동시 수용 가능한 규모를 갖고 있으며, 교육관, 생활관, 봉사관,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하나원의 교육생 훈련 및 배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하나원배출현황

	1999			2000							2001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12기
입소	20	9	21	41	27	30	41	49	48	61	59	53
계	3개기 61			7개기 297							2개기 112	
퇴소	19	9	32	41	27	30	41	49	48	61	-	-
계	3개기 60			7개기 297							-	
총계	12개기 470명											

(9, 10기는 2001년 2월, 3월에 퇴소하여 취업등이 미정상태이며, 11, 12기는 교육중임)

현재까지 총 12개기 470명 입소, 10개기 357명이 퇴소하였으며 2001년 4월 현재 11, 12기 112명의 교육생이 훈련을 받고 있다. 총입소자의 성별비율은 남 273명(58%), 여 197명 (42%)으로 나타났다(하나원, 2001. 4). 개원초기 남성위주 입소에서 가족단위 입국이 증가하여 여성의 입소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18〉 퇴소후 일반적 상황

연령	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명(비율)	28(6%)	60(13%)	125(27%)	143(30%)	65(14%)	29(6%)	20(4%)
계	470(100%)						
정착지역	수도권		대도시			지방	
명(비율)	184(52%)		61(17%)			112(31%)	
계	470(100%)						
경제활동유형	취업	취학	직업훈련	비경제활동인구	무직 및 기타		
명(비율)	78(31%)	54(22%)	25(10%)	68(28%)	23(9%)		
계	248(100%)						
자매결연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명(비율)	289(81%)	15(4%)		3(1%)	50(14%)		
계	257(100%)						

하나원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립·자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3개월(총 520시간)단위로 교육생의 특성, 교육여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심리안정 정신 순화교육(76시간, 15%), 문화적 이질감 해소(268시간, 52%) 직업보도 및 취업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 직업훈련 강화(140시간, 27%)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을 마친 후 지역사회로 나가서 실제의 적응을 시작하게 된다.

2) 목적설정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계획되어진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내에서 적절하게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2가지의 목표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결과 목표로 계획된 최후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며 성공적인 계획적 변화노력 끝에 원하는 국면을 설정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적절한 사회적응 상태를 위하여 4가지 체계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주민,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복지사, 정부가 각기 주요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둘째 방법목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관한 것이며 결과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추구되어 질 수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욕구 발견, 지역사회와의 관계 수립, 주요문제 발견, 가능한 해결 방안접근 등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각 영역마다 주요 하위목표를 세워나갈 수 있다. 목적설정의 사례¹⁵⁾를 예로 보면 다음과 같다.

15) 사례의 경우는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 현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있는 적응 프로그램을 참조 하였다.

【목적】

초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화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

- 목표 1 : 사회적응도와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하위목표 ①초기면접을 실시한다.
 - ②사회적응욕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목표 2 : 다양한 일상생활을 직접 경험하게 하므로 일상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 하위목표 ①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입출금,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카드사용 등을 경험한다.
 - ②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의 종류와 이용방법을 알아본다.
 - ③백화점, 할인마트, 시장을 직접방문하여 각기의 특징과 차이점을 체험하고 장단점을 파악한다.
 - ④언어 훈련을 실시한다.

3) 과업수행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목적들이 결정되고 나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져야하는 특수한 과업이 있게 된다. 이 과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다. 목적을 과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프로그램은 구조와 내용으로 구분하여 체계화시켜 나갈 수 있다. 프로그램의 구조의 경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간, 횟수, 서비스 인력구조, 장소 협력자의 역할 및 과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 간		간 격	매주 2회
소요시간	10:00~15:00	회 수	총8회(16 session)
인 력	주지도자(담당 사회복지사1명), 보조지도자(자원봉사자 1명) 기타(신변보호담당관1명)-총 3명		
장 소	은행, 동사무소, 백화점, 할인마트, 재래시장, 우체국, 경찰서, 관공서 대화복지관, 영화관, 방송국, 불링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택		
지도자의 역할 및 과업	사회복지를 전공하였고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기관실무자		
	①전체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②세부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③세부프로그램 준비물 준비 / 프로그램 진행 ④초기면접 실시 ⑤사회적응 욕구 체크리스트 작성 ⑥과정기록작성- 과정기록,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세부프로그램 평가, 지도자의 역할 수행평가 등을 기록 ⑦예산수립 및 집행 ⑧차기 프로그램 방향성 모색 ⑨전체종합평가서 작성		
프로그램 매개체	①언어 훈련과제의 제시 및 수행 ②각종설문지(사회적응욕구 체크리스트, 사전사후 설문, 만족도 설문 등) ③토론 ④체험중심		

또한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영역, 지역탐방, 문화탐방,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에 따라 세부적인 영역 및 내용이 구성되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시간표 설정, 프로그램 운영방식 결정 사회적응 매뉴얼 학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 나가야 한다.

(1) 전체일정

시간	준비단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비고
	11/9	11/15	11/17	11/22	11/24	11/29	12/1	12/6	12/8	
10:00	초기면접	일상 생활 적용 I	지역 탐방 I	일상 생활 적용 II	서울 드라 이브	자원 봉사 I	지역 탐방 II	일상 생활 적용 III	일상 생활 적용 IV	
12:00	사회적응 욕구	점 심 식 사								
13:00	체크리스트 작성	여가 생활 I	문화 생활 I	여가 생활 II	서울 드라 이브	문화 탐방 II	자원 봉사 II	문화 탐방 III	소감문 작성/ 종결설문	
15:00										

(2) 세부 프로그램 내용

회기	목표	프로그램명		내 용
준비 단계	1	준비단계	초기면접	①초기면접을 통한 대상자 파악 ②사회적응욕구 체크리스트 작성 (대상자직접작성)
1 7	2-①	실 행 단 계	일 상 행 활 적 응	은행 ①통장개설(주민등록증, 도장) ②입출금,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실행 ③카드발급 및 활용 ④프로그램 평가(평가설문지 작성)
	2-②			동사무소 ①거주지 해당 동사무소 방문 ②사전에 담당자와 의사소통 ③주민등록, 인감, 호적, 세무 대형폐기물, 사회복지등의 민원사항 ④프로그램(평가 설문지 작성)
	2-③			백화점 할인마트 시장 ①재래시장, 할인마트, 백화점 방문 ②백화점(롯데백화점), 할인마트(LG마트), 시장(가락시장) ③프로그램 평가(평가 설문지 작성)
	2-④			언어훈련 ①매회 프로그램마다 언어 훈련 실시 ②언어 훈련 내용 문서화 ③언어 훈련 과제 부과

4) 평 가

평가는 계획적 변화과정의 계속되는 활동의 하나로서 과업의 목표달성 여부를 파악하고 적응노력의 방법과 목표의 재조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평가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반응 평가로 북한이탈주민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스스로 느끼는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부분이며 둘째, 학습평가는 북한이탈주민이 프로그램 수행이 전과 후에 남한 사회인식정도와 남한 실생활의 편이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고, 셋째, 수행평가의 경우는 프로그램 종결 이후에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활용해 나가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평가 작업은 계속되는 목적 및 목표에 feedback을 주게 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기여해 나갈 수 있게 된다.

5) 종 결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적용한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적응 프로그램은 종결하게 된다. 종결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의 완전한 적응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착점을 결정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2년 정도 무적인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에 참여를 구성할 수 있다. 의무적 기간동안 실제 전담사회복지사의 지도하에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남한 실생활 적응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V.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의 방향과 역할

1. 사회복지 지원의 방향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인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보는 시각과 정책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구호대상으로 보느냐 혹은 궁극적인 남한국민의 일원으로서의 통합적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였는가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¹⁶⁾. 이는 곧바로 우리가 북한주민을 어떤 상대로 인식하느냐는 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을 통일을 같이 이루어 갈 주체라고 인식한다면, 이들이 위기상황을 피해 탈북하였을 경우 제대로 보호하여야 하며, 국내 입국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주민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한편 스스로의 탈출욕구에 의해 남한으로 왔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도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정책이 갖는 통일환경 및 사회통합적 의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집행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원활용에 있어서 정부가 갖을 수 있는 정책의 동기는 정부를 뒷받침하는 민간의 동기와 역할 설정을 유도하게되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정책 전개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돕는 역할이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돕는 역할에 밑받침되는 동기의 유형도 새

16) 오혜정, “남과북을 이어주는 탈북자,” 『통일과 카톨릭 사회복지』, 21세기 카톨릭 사회복지 심포지움 자료집(서울; 1999), p. 7.

로운 것은 아니다. 돕는 동기의 유형 발달은 이미 전 산업시기에 태동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및 정책을 향상시켜 나가는 원동력을 제공하여 왔다. 동기의 다양한 유형은 서비스를 관장하는 입장(supporter)과 실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는 입장(helper)으로 분류해서 파악해 볼 수 있다.¹⁷⁾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관장하는 영역을 정부 혹은 기관으로 보고 서비스를 실행하는 영역을 민간 및 사회사업가로 보았다. 이들의 동기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까지 네 단계, 즉 인도주의(humanitarian), 사회통제(social control),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인도주의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의 고난과 불행을 인도적 차원에서 덜어 주려는 측면과 관련된 것이고, 사회통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불만족을 억제하거나 위기적 문제의 성격을 재조정하려는 체제 유지적 형태의 동기이며 사회적 효율성은,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지원하여 받은 도움을 되갚는 형태의 것이며, 사회적 변화는 불공정한 사회적 조건을 제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를 옹호해 나가는 동기이다. 한편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 성향에서 개혁적 성향까지 네 단계로 구별되어질 수 있다. 첫째, 순수한 이타주의(altruism), 둘째, 자기향상(self-advance-ment)의 바람 즉,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기능을 향상시켜 바람직한 시민으로의 생활을 유도하려는 동기, 셋째, 대상자의 변화 즉, 북한이탈주민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 넷째, 사회의 변화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을 해나가는데 불공정한 사회적 요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양측의 교차점은 16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 만나는 점은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의 동기들은 서로 상호 배타적이지 아니며 서로 특별한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이다. 한편 각기의 동기들이 대칭적일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즉 서비스가 체계화되어지지 않으면 비 종교화되기가 힘들게 된다. 두 축의 동기가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과 서

17) Catherine Jones, *patterns of Social policy :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Analysis*, (Tavistock publications, London, 1985) pp. 93~101.

비스는 전문적 형태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동기유형을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정책은 생활안정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요구되어지며 이는 동기의 측면에서 정부 입장의 인도주의 관점이나, 민간입장에서 순수한 이타주의 내지는 자기향상의 관점은 벗어나야 가능할 수 있다. 바람직한 영역은 사회적 통제 즉,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적 문제를 해결하여 불만족을 억제해 나가는 부분부터 사회적 효율성까지로 경제적 독립을 할 때까지 지원한 후 이들이 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남한사회의 이질감을 극복하여 남한사회로 통합되어지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할 때 불공정한 사회적 조건이나 사회적 요소들의 제거 작업이 필요한 사회적 변화의 동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위기적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갈등과 혼란의 기간을 잘 넘겨 재사회화를 통한 남한사회로의 통합을 유도하는 사회적 통제의 동기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향을 변화시켜 나가는 대상자 변화의 동기의 범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측면 적응의 문제는 매우 개별적 형태이며 개인의 심리적 성향이 어느 영역보다도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또한 적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심리적 갈등 및 동화의 과정을 거쳐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남한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의 불행함 등을 덜어주는 차원의 인도주의적 동기와 순수한 이타주의의 관점 혹은 자기향상의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살피나가는 동기유발이 요구되어진다.

이와 같이 각 영역별로 차별화 된 기준 하에 정책 서비스를 구상하고 실시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체제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역은 경제적 지원중심의 정부 지원제도와 더불어 사회심리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

앞에서 연구의 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욕구는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도 차이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경제적 안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심리적 안정이 연계되어질 때 전반적 적응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이 개인 혹은 가족단위의 형태로 진행되어 질 때 적응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즉 정부 중심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필요한 생활전반의 지원요소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지원해 줌으로써 남한 생활의 적응을 높혀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사회적 기능회복과 삶의 질의 향상에 있다. 이를 위하여 시장 체제밖의 경제적 이전방식으로 시장가격에 의한 비용지출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급여배당 메카니즘 기능을 하게 되며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로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국가에 의해 최저한의 평균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개인·가정 집단에 제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민간영역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자립 및 사회적 기능회복을 통한 능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국가와 민간의 영역에서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경제적 급부중심의 국가정책적 서비스와 병행하여 민간영역에서 개발 담당해 나가도록 해야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어려움없이 정착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질감과 적대감으로 발생하는 걸림들을 고려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구성과 개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보면 초기단계의 하나원시설에서의 3개월 적응 훈련과정이 있다. 이후 지역사회로 나아갔을 때의 적응을 위한 전문적 개입은 현재 지역사회복지관 및 민간단체 중심으로 일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 주민의 지역사회편입 후의 과정을 보면 사회적응 및 안전을 위하여 경찰을 통한 신변보호 전담관제(2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

고있다. 또한 1999년 8월 이후 거주지 보호 담당관제를 도입 시행하여 자립 정착을 위한 지원과 사회복지관 및 민간 지원단체와의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민간 및 종교 단체의 지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만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의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거주지 보호 담당관제의 의무화(2년)가 요구되어지며,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지역사회 복지사가 맡아 전문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 국가에서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복지의 본래적 목표인 인간의 개별적 사회적응에 준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장기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구영록, 임용순. 『한국의 통일정책』. 서울: 나남, 1993.
- 국토통일원. 『과학적 통일 이론 연구』, 서울: 1976.
- 김국진 외. “남북관계 현황 및 96년 정세전망,” 『민족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1995.
- 김대중.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서울: 대한민국정부, 1998.
- 김명세. “탈북자의 사회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연세대통일연구원, 1996.
- 김연명.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에 관한 연구 : 의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북한통일연구 논문집(VI)』. 1991.
- 김진수. “서독의 분단관리 정책과 통일 후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1994.
- 문옥윤. “북한의 보건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의료보험관리공단』. 1989.
- 문옥윤 외. “남북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방안,” 『보건사회연구논집』. 1993.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가족정책의 변화』. 1993.
- _____.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회적응 실험교육 프로그램안』. 1997.
- _____. 『정착지원시설 보호대상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1997.
- _____. 『탈북 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1997.
- _____.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1998.
- _____.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책전망과 우리의 통일방안』. 1994.
- _____.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1998.
- _____.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1996.
- _____.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5~1996』. 1995.
- 박경애. “귀국 청소년 적응력 향상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5.

- 박순성 외.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민족통일원 연구보고서』. 1993.
- 박영호 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분석- 전문가인식조사 결과,” 『민족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1999.
- 박종철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1996.
- 보건과 사회연구회. “북한 사회주의 이행발전과 보건의료,”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론』. 서울: 한울, 1990.
-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현황』. 1997.
- _____. 『국민기초생활안내』. 2001.
- 베르너 푸쉬라. 『통일독일의 사회경제적 변화』. 서울: 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1993.
- 빅조지, 폴 윌딩 저. 남찬섭 역,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4.
- 서정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문제,” 통일원, 1999.
- 선한승. “북한 탈북 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정책과제,” 1995.
- 송의호. “귀순자의 내면세계 그리고 남한사회수업,” 『월간중앙』. 1995, 1.
- 신상진. “중·북 관계전망 - 미·북 관계와 관련하여,” 『민족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1997.
- 신영석. “북한 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대책,” 『서경대 제4회 통일학술발표 논문집』.
- 안혜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0.
-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 오정수. “북한의 사회체제 변동과 사회정책의 전개과정,”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 사회문화적 측면” 1995.
- _____. “남과북을 이어주는 탈북자,” 『통일과 카톨릭 사회복지』, 21세기 카톨릭 사회복지 심포 지음 자료집, 1999.
- 월렌스키외 저, 남찬섭 역. 『비교사회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2.

- 윤덕룡, 강태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연세대통일연구원논집』. 1997.
- 윤여상. "남한의 귀순동포에 대한 정책연구," 『영남정치학 회보』. 제5호 1995.
-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실태와 정착 지원의 새로운 접근,"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1999.
- 윤인진. "소수자 연구 시각에서 본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 과정," 『한국사회학회』. 1999.
- 이금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9.
-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과 우리의 과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97.
- 이금순. "탈북 주민의 국내 정착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이장호. "남한 이주자의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1999.
- 전우택, 민성길. "북한귀순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대책을위한대토론회자료』. 서울: 1996.
- 조 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좋은 벗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서울: 정토출판, 1999.
- 토드 부크홀츠 저, 이승환역.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현대 경제사상의 이해를 위한 입문서』. 서울: 김영사, 1989.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서울: 통계청, 1997.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매뉴얼』. 서울: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2001.
- 한겨레신문사. 『통일준비 여성지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7.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동향』.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8.
- 한국복지연구회.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3.
-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저.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 서울: 열음사, 1990.

-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저.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I』. 서울: 열음사, 1990.
- 한국정치연구회편. 『국가와 시민사회: 조절이론의 국가론과 사회주의시민론』. 서울: 녹두, 1993.
- 홍원탁 외. 『IMF 시대 한국 사회 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울대학 사회과학대학, 1998.
- 후리드리히 에베르. 『독일통일의 사회경제적 변화』. 1992.
- Anderson, Gosta Espin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1990.
- Berry, J. W.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A conceptual overview Berwyn*. PA: Swets North America. 1988.
- Jessop, Bob. "Towardss a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Preliminary Remarks on Post-Fordist Political Economy,"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40. (Spring, 1993).
- Jones, Catherine. *Patterns of Social Policy :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Analysi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1985.
- Kitschelt, Herbert.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Papadakis, Elim & Peter Taylor-Gooby,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Welfare: State, Market and Community*. Wheatsheaf Books, 1987.
- Pierson, Christopher. *Beyond the Welfare State?* Londodn: Polity Press, 1991.
- Wainwright, Harry. *Arguments for a New Left: Answering the Free Marke Right*. Blackwell, 1994.
- Wilensky, Garold.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uc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s*. UC Press, 1975.

Wilensky, Harold. *Leftism, Catholicism, and Democratic Corporatism: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Recent Welfare State Development*. Flora and Alber, 1981.